

北과 비핵화 전제 대화, 한미동맹 강화… 균형 외교 ‘시험대’

한반도 정책·외교 안보

한미, 공조 폭 확대 등 재건 전망
첫 정상회담 의제 중심 ‘북한’
한중관계 단기간 적응기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한편,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글로벌 초강대국 사이 전략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며 미묘한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 넘어 재건해야”

우선 윤석열 시대 한미 동맹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과 경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



윤석열 대통령과 왕稚山(오른쪽) 중국 국가부주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

치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다.

대북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기존동맹 관계도 타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월 정책 협의단 단장으로 방미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간 대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의 공조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외교엔 ‘거리두기’… “실리 쟁겨야”

이날 중국 유력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중 관

계를 잘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 편향 정책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품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둑일’로 전략시키려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암박했다.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뤄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전날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 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대북 비핵화 전제 대화할 것 … MB 대북정책 실패 답습?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적으로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트맨 더글러스 엠훈호 변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젠 사카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지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의 문은 열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사람 중시’ 혁신 최우선… 軍 현대화·과학화 ‘촉각’

2030 장병들이 바라는 국방혁신은

병력자원 부족 인한 약병화 초래
군수지원 부실 등 개선사항 임 모아
국군조직법·군인사법 등 개정 절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이전에 모습을 보인 곳은 서울 용산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동작구 서울현충원이었다. 병역이 면제된 국군통수권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2.0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수 계승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군 장병들의 기대도 크다. 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약전 장병들은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못지 않게 ‘사람을 중시하는 군대문화’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인터뷰에 응한 2030 장병들은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약병화(弱兵化)’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수지원의 부실’을 가장 시급한 국방혁신 분야로 손꼽았다.

육군의 한 초임장교는 “병역이행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뉴스

두고 군간부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또래 친구들은 간부 선택에 대해 많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선진 군사강국은 간부로 복무한 경력이 사회 진출에 강점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초임 장교는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에, 간부라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고 취업시장에서 뒤쳐지는 현실이 불안

하다”고 덧붙였다.

20대 초반의 해군 부사관은 “높은 임무 강도와 열악한 복무환경 탓으로 해군부사관의 장기복무지원이 미달이 되는 사태에 달했다”면서 “해군의 경우 함정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부대 개념인데 함정은 늘어나지만, 함상복무를 할 인적자원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육군과 공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화와 현대화가 전력증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장병들은 ‘현실적 급여 지급’, ‘군복무 간 필요한 충분한 의식주 해결’이 국방혁신의 선결 과제라고 평가했다. 군복무보다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급여가 절대 많은 금

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전역 전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짧아진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 임무수행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과 급식을 비롯한 보급품의 부실도 2030 병과 간부들이 공통으로 인식한 문제였다.

30대 초중반의 일선 지휘관들은 ‘사람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하는 군의 편성과 편제’, ‘합리적인 사고로 군수뇌부와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을 혁신 과제로 손꼽았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관리자로서 고민들이 많아 보였다.

의명의 육군 지휘관은 “군무원 증원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비전투 부대라고 하더라도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전쟁법상 교전권이 있는 군무원에게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외부 인력자원을 끌어오기보다 군사복무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부사관 및 장교로 임관시키고, 군무원 보직을 예비역 승계 보직으로 전환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군 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군무원인 사법, 예비군법, 군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의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의 핵심인 셈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